

與 “청문회 때문에 심의 못해” 野 “협상 전 과정 공개하라”

美 관세인상 폭탄 맞은 정치권

민주 “정상적 절차 따라 진행 중”
국힘, 국회 긴급 현안질의 제안
외통위·산자위 등 전체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하자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당은 한미통상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재인상 조치가 의아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협상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며 정쟁화하려는 모습이다. ◆與 재경위 간사 “정상적 입법 절차 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와 설 민생 현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예정했지만, 관세 재인상 사태에 정부로부터 관련한 보고도 함께 들었다.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 재인상의 배경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한미투자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 작년 11월말에 특별법이 발의됐고 12월에 개인 발의로 법안이 4건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의원들과 ‘한미 간 관세협상’ 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1월 재경위 차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안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작년 12월은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어서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다”면서 “2월 달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정부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월달에 상정해서 통과해달라는 요청이 오늘 보고서에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무관하게 국회는 정부가 2월달 심의·상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해당 법안을 의도

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한데에서 온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발표가 있기 전에 (미국 측에서) 실무적으로 외교라인을 통해서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다”고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외교부-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신참고인으로 하는 무역합의 성실이 행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野 “협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 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을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발목잡기’로 매도해 왔다”며 “합리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느긋한 모습만 보여 왔다. 오늘

의 사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산자위도 김경관 산업부 장관의 캐나다·미국 출장이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신학 산업부 1차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특별법 처리 지연이 관세 재인상의 이유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한미관세협상이라든가 대미투자에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식이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모두가 수용하고 용인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국 측이 한국 입법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했고,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소요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도 6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정부가 설명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 본부장이 다보스포럼에서 미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났을 때도 한국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나온 적 없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장동혁 퇴원 후 한동훈 징계 처리 ‘골몰’

국힘 소장파, 징계 재고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후 나흘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징계 처리를 두고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 최고위 의결 여부는 일단 보류되게 됐지만, 지난 주말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 수만명이 여의도 일대에 운집해 제명 징계 반대 집회를 벌이며 두 사람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지

만, 한 전 대표는 징계 결과를 짜 맞추는 당 중앙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날(26일)엔 친한(친한동훈) 정치인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중앙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소식을 접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 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림개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전날 의총에선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의총에 참여했던 원내당협위원장들이 한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자,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의총장을 나갔고, 이 행위를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적했다고 한다.

소장과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청하고 한 전 대표에겐 지지자들의 집회 중단을 요청했다. 이성권 대안과미래 간사는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당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 결정을 재고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뉴시스

故 이해찬 전 총리 장례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엄수

출장 중 호흡곤란… 향년 74세
상임 장례위원장에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7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을 영접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총리의 장례를 27~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신분으로 아태지역회의 참석차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장을 떠났던 이 전 총리는 이튿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 귀국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에서 이송됐다. 이 전 총리는 병원에 도

착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지난 25일 향년 74세에 별세했다.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숨졌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 정부특보인 조정식 의원이 상임 집행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는다. /박태홍 기자

“비정상적 부동산 집중 바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언급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과 맞물려, ‘자산의 부동산 집중’ 완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는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곳곳하

게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대해 주식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주식 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